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8. 30.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정환 의원 등 10명(남현주, 장호섭, 박종길, 도하석, 황국주, 정순옥, 서보영, 김장관, 최홍린)
- 발의일자: 2022. 8. 18.(목)
- 회부일자: 2022. 8. 18.(목)
- 상정 및 의결: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8.30.)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단체 및 개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신고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장기요양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2. 8. 18. ~ 2022. 8. 29.)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¹⁾를 도입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시장화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요원의 처우 및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을 인정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²⁾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2%가 언어폭력을, 16.0%가 신체적 폭력을, 9.1%가 성희롱 및 성적 신체접촉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2022년 8월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26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140개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또한 2020년 10월 5일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7월 현재 달서구 내 장기요양기관은 262개소로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38개소,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60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63개소이며, 이중 개인 235개소, 법인 27개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지원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을 위한 상위법령에 법적근거가 타당하고, 정책시행의 필요성이 있고, 기대효과 또한 합리적으로 충분하다고 예상되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사료됨.

2) 강은나 외 4인,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 (설문대상 3,834명)

<표 1> 광역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 제정현황

구분		제명	시행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1. 3. 25.
2	대구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0. 10. 5.
3	인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21. 2. 23.
4	광주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20. 6. 1.
5	대전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22. 4. 15.
6	울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21. 6. 19.
7	경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2019. 10. 1.
8	강원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2020. 11. 6.
9	충북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2022. 2. 11.
10	충남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20. 4. 1.
11	전북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2020. 7. 13.
12	전남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2017. 9. 28.
13	경남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7. 12. 7.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8. 11. 21.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